

洪錫律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信託 統治 문제에 대한  
중등교육과정 교과서 서술 분석

2005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金 英 嬌

信託 統治 문제에 대한  
중등교육과정 교과서 서술 분석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5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金英嬌

# 認 准 書

金英嬌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논 문 개 요

1945년에 열린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 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측의 제안과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측의 수정안이 토론되었다. 당시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미·소가 분할 점령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주요 결정 내용은 조선에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임시 민주정부와 협의 하에 최고 5개년의 신탁 통치 정책을 작성한다는 것이며, 양국 사령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내용을 단순히 신탁 통치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탁 통치안의 최초 구상은 미국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이었다.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내용이 국내 전달과정에서 『동아일보』를 통하여 신탁 통치안이라고 왜곡 보도 되었고, 신탁 통치의 제안 주체가 소련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면서 반탁 운동이 국내에 거세게 일어났다. 후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반탁 운동은 이미 반소, 반공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신탁 통치 논쟁은 국내 좌우익의 대립을 점점 격화시켰고 분단의 외적구조인 냉전의 형성을 재촉하였다. 신탁 통치 파동 이후 국내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크게 바뀐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해방 직후 정치사를 가르는 하나의 획기로서 이는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신탁 통치를 제안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사 교과서에 보이는 신탁 통치 관련서술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의 내용이 신탁 통치안으로 단순화되

고, 신탁 통치의 제안 주체도 밝히지 않은 채 반탁은 애국, 찬탁은 매국의 논리로 단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좌익이 소련의 사주로 인하여 모스크바 3상 결정지지로 돌변하였다고 서술하고, 미·소 공동회의의 결렬 책임도 소련과 좌익에게 전가시켰다. 여러 번의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서술경향이 매번 전에 나온 교과서의 내용과 흡사하고, 어떤 부분은 서술 자체를 전 교육과정의 내용과 변화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또한 문제는 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학계의 신탁 통치 문제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국사 교과서의 신탁 통치 서술이 조금 더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근현대사 부분이 한국근·현대사라는 심화선택 과목으로 되었다. 7차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이전의 국정 교과서와는 다르게 선택적이고 주관적인 서술이 많이 극복되었고, <탐구활동>과 <읽기자료>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검정 기준에 의하여 모스크바 3상 결정의 내용을 신탁 통치에 맞추어 반탁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도록 하였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국정 교과서들과 비교해 전혀 시각의 차이가 없는 서술들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80년대부터 반탁은 애국, 찬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인 논리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분단의 원인도 반탁, 모스크바 3상 결정지지 문제에서 시작된 좌우대립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요하니 문제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모스크바 3상 결정과 신탁 통치 문제 .....	4
1. 모스크바 3상 결정 .....	4
2. 신탁 통치의 제안 주체와 성격 .....	6
III. 국사 교과서 신탁 통치 서술의 추이 .....	10
1. 정부수립 직후 반공이데올로기 확립과 교과서 서술 .....	13
(해방직후~1950년대와 1차 교육과정)	
2. 군사독재정권기의 신탁 통치 서술 (2차~5차 교육과정) .....	15
3. 민주화 이후 국정 교과서 서술의 추이(6차~7차 교육과정) .....	21
IV. 검·인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 .....	29
(7차 교육과정 6종 교과서)	
VI. 결 론 .....	42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1945년 말 1946년 초의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은 해방 후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좌우대립의 원인이 된 한국 현대사의 최대 사건이다. 이 기간 동안 미·소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분단의 외적구조인 냉전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한 신탁 통치 파동 이후 국내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크게 바뀐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해방 직후 정치사를 가르는 하나의 획기로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은 주로 정치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체로 해방 3년사는 신탁 통치 문제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을 알고, 대다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sup>1)</sup>라고 규정하여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는 기준을 반탁 운동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 민족이 통일 민족국가 수립에 실패하고 분단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과정, 또 건국노선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대결구도가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로 고착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논점이다.<sup>2)</sup>

그런데 신탁 통치 문제는 국제적, 국내적 문제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사회가 점차 분단중심의 사고를 극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데올로기 갈등이 곳곳에 잠복해 있고, 현대사 교육이 “실제 교육현

---

1) 7차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교육부, 『사회과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176쪽.

2) 김종훈, 「한국현대사는 어떻게 가르칠까?」, 안병우 외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272쪽.

장에서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단지 “교과서가 누구의 관점으로 서술되는가”만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탁 통치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내용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나 주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서술내용과 서술체계, 개정방향,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룬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학계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한층 구체적이면서 심도 있는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사 교과서에 보이는 신탁 통치 관련서술은 여러 번의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서술 경향이 매번 전에 나온 교과서의 내용과 흡사하고, 어떤 부분은 서술 자체를 그대로 답습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또한 문제는 학계의 신탁 통치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국사 교과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의 냉전체제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장기간 군부정권이 유지되고, 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국사 교과서에서 신탁 통치 서술은 불균형이 생기고, 상당부분 왜곡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최근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서 쟁점화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1차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 중,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내용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서술변화가 나타나게 된 정치적 배경과 교육과정, 학계의 연구동향 등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7차에서 등장한 검인정 6종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각 출판사 별로 신탁 통치 관련내용을 비교, 분석해보면서 각 출판사들의 내용서술과 시각의 차이, 서술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다.<sup>3)</sup>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모스크

---

3) 연구범위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국사 교과서의 신탁 통

바 3상 회의 결정과 신탁 통치 관련 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치 관련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1946년 발행된 『국사교본』은 현대사 부분에 대한 서술이 아예 없으므로 제외시켰고, 1차 교육과정의 검정 교과서 2종, 2차의 검정 교과서 2종, 3차부터 7차까지는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차 국정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대사 내용서술이 적은 관계로, 6, 7 차 교육과정의 경우는 중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도 비교 연구하여 모두 17종의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Ⅱ. 모스크바 3상 결정과 신탁 통치 문제

### 1. 모스크바 3상 결정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소집한 이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민족 내부에서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sup>4)</sup> 그러므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내용은 우리 민족이 미·소가 분할 점령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타결된 최종 결정의 문안은 다음과 같다.

#### < 표 1 >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의 전문<sup>5)</sup>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제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다.</li><li>2.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할 제 정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한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li><li>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li></ol> |
|--|

4) 정인웅,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33쪽.

5) 정용욱, 『해방전후의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48~149쪽.

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협력하는 제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한과 관련된 긴급한 제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간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 방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12월 28일에 발표된 최종결정문안)

위의 각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제 1항은 민주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조항이며 제 2항은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조항이다. 제 3항은 미·소 공위가 임시정부와의 협의 하에 최고 5개년 신탁 통치 정책을 작성한다는 것이며, 제 4항은 양국 사령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합한다는 규정이다.<sup>6)</sup> 즉 이 모스크바 3상 결정은 ‘미·소 공위 설치-> 임정수립-> 신탁 협정 작성’까지의 단계를 규정한 것으로 그 중심 내용이 신탁 통치에만 있기 보다는 독립을 위한 민주 임시정부 수립(1항)과 신탁 통치 방안의 작성을 위한 미·소 공위 수립(2,3항)이라는 내용도 있다.<sup>7)</sup> 특히 결정문 제 3항에는 미·소 공위가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제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4개국 신탁 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소·영·중 제국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곧 신탁 통치안의 구체안은 미·소 공위와 4개국이 마련하지만, 임시정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커밍스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은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이 거의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한다.<sup>8)</sup> 또한 이승만·한민당이 미·소공위에 협조할 의향을 보였을 때 『동아일보』는

6)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6, 229쪽.

7) 이완범, 앞의 논문, 230쪽.

8)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권, 청사, 217쪽.

신탁 통치는 4개국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수립될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3상 회의 결정과 반탁은 별개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그리고 원래 신탁 통치를 실시하려 했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안이 분할점령 전에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곧바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미·소는 분할점령을 단행하였다. 그렇다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단지 ‘5개년 이내 4개국 신탁 통치’ 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모스크바 3상 결정을 곧 신탁 통치안 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3상 결정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한국문제 해결안’이나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 공동 위원회 수립안’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sup>10)</sup>

## 2. 신탁 통치의 제안 주체와 성격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의 내용이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언급 없이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것으로, 신탁 통치를 먼저 주장한 제안주체가 소련으로 국내에 잘못 알려 지게 된 것은 1945년 연말 『동아일보』 왜곡보도를 시초로 한다. 『동아일보』 왜곡보도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에서 자세한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12월 24일경부터 『동아일보』는 반소 기사를 게재했고, 26일에 이승만은 소련이 신탁 통치안을 주창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방송을 했다.<sup>11)</sup> 신탁 통치 파동에 결정적 도화선이 된 것은 『동아일

9) 설의식(동아일보 주간), 「삼상과 반탁은 별개-5호성명과 우리의 각오」, 『동아일보』 1946년 5월 4일자. 이와 비슷한 논리에 관해서는 안재홍, 「자력건설과 자주건국」, 『민세 안재홍전집』 2, 지식산업사, 1983, 112~116쪽.

10) 이완범, 앞의 논문, 230쪽.

1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06~309쪽 참조.

보』 1945년 12월 27일자 머릿기사이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서가 공식 발표된 것이 서울시각으로 12월 28일 오후 6시이니 이 기사는 3상 회의 결정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 주한 미군사령부가 결정서를 입수하기 이틀 전에 발표된 이른바 추측보도이다. 아래 인용문은 그 기사의 전문이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독립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 가고 있다. 즉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당시에 소련의 신탁 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한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관한 일국 신탁 통치를 주장하여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 워싱턴 25일발 합동 지급보.<sup>12)</sup>

이 기사는 3상 회의 당시 미·소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정반대로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정서의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왜곡보도이다. 한민당과 우익은 이와 같은 왜곡보도를 바탕으로 신탁 통치 주창자는 소련이며, 모스크바 결정을 찬성하는 공산주의자는 소련의 앞잡이이자 매국노라고 몰아갔다. 우익 정치세력은 반탁 운동으로 좌익과의 세력 불균형을 일시적으로 만회할 수 있었다.<sup>13)</sup> 물론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국제적 모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후

12) 『동아일보』 1945.12.27, 정용욱. 앞의 책 158쪽에서 재인용.

13) 정용욱, 앞의 책, 186쪽.

일부 연구자들이 배후가 있었거나 최소한 당시 언론기관을 통제했던 미국의 고의적인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sup>14)</sup>

『동아일보』의 기사는 1946년 1월 하순 타스(Tass)통신이 모스크바 3상 결정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한국민에게 반소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왜곡보도 사건을 계기로 반탁 운동은 반소·반공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과 소련 중 어느 쪽이 먼저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고,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신탁 통치안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해 구상된 것이었다. 윌슨식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을 신봉하였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식민지에서 독립될 지역에 ‘신탁 통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것을 구상하였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1943년의 시점에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이 루즈벨트 개인의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최초로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카이로 회담이 열린 1943년 11월 미국과 영국, 중국의 세 거두(루즈벨트, 처칠, 장개석)는 조선의 독립이 “in due course”로 달성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in due course”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는 독립을 유보하며 과정적으로는 모종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종의 절차란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5)</sup>

조선의 신탁 통치 실시는 카이로회담 이래 미국의 기본정책이었다.<sup>16)</sup> 이는 해방 후 10월에 와서 구체화되었으며,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

14) 정용욱, 앞의 책, 159쪽.

15) 이완범, 앞의 논문, 218~220쪽 참조.

16) 이완범, 앞의 논문, 231쪽.

번즈 미 국무장관이 제출한 것도 유엔헌장 제 79조 등과 연관되어 있는 신탁 통치 방안이었다. 17) 해방 이전만 해도 계속되는 미국의 신탁 통치 주장에 대해 소련은 마지못해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었다. 그러던 중 소련의 몰로토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 3상 외상 회담 과정에서 번즈안에 대해 임시 정부안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임시정부 수립안에 신탁 통치안이 덧붙여진 방안에 양국 외상이 합의한 것이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타협하였다. 미국은 신탁 통치라는 자국의 기본의도를 관철 시키는 가운데 유엔주도 하의 신탁 통치를 4개국 주도 형식으로 양보하면서도 신탁 통치 주도 4국에 비교적 친미적 국가(영국과 중국)를 포함시켜 자본주의 국가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소련은 즉시 독립안을 양보하고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현 상황으로 보아 소련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민주 임시정부 조항을 첨가함으로써 신탁 통치의 성격을 ‘강대국의 영향이 비교적 약하고 국내정치 세력의 참여가 보장된 후원제’로 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3대 1의 불리한 조건을 수락하였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이 국내에 처음 전달되었을 때 미국이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고, 소련은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정반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쪽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지,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

17) 서중석, 앞의 논문, 169쪽.

18) 이완범, 앞의 논문, 232쪽.

### Ⅲ. 국사 교과서 신탁 통치 서술의 추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왔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에 따라 교과서도 새로이 쓰여 졌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집권 정부의 성격, 지배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추진되었다. 국사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총 7차례의 개편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해방 직후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부터 국사교육 형성기인 1차 교육과정, 유신 체제와 군부 정권시대인 2~5차 교육과정, 민주화 이후의 6, 7차 교육과정까지 국사 교육과정의 정책상 추이와 이와 결부된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교과서 내용 서술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1. 정부수립 직후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립과 교과서 서술

(해방직후 ~ 50년대와 1차 교육과정<sup>19)</sup>)

미·소 공동 위원회가 파탄되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1947년 중반 이후부터는 분단의 위기의식이 지식인 사회에 대두하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분단국가의 지배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급변하는

19) 국사 교육과정의 변천과 정치적 변화 및 교과서의 개편 양상은 다음과 같다.

국사교육 과정	1차 과정기 (1954-1963)	2차 과정기 (1964-1974)	3차 과정기 (1974-1981)	4차 과정기 (1981-1987)	5차 과정기 (1988-1996)	6차 과정기 (1996-2001)	7차 과정기 (2002-현재)
정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중요한 정치적 사건	1950년 6.25전쟁	1961년 5.16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1980년 신군부 집권	1987년 6월 항쟁	1992년 민정이양	
교과서 개편			1974,79년 사회과 독립	1982년	1990년	1996년	

출처: 정혜영, 「중·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내용 변화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4쪽.

정세 속에서 이를 학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일제 강점기 이래 축적된 연구 성과를 公刊하거나,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민족사 교육을 위해 교과서 등을 간행하는 일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동안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이승만이 단일정부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한국 전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변혁과 분단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극우세력의 승리로 끝내고, 독재체제 강화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약 200만 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를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종결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 남한 내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인한 지배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하여 극우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됨으로써 반공이데올로기는 그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를 사상적 논리보다는 경험적 인식으로서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시기의 지배이데올로기 역시 정치 군사적 결과로서 강요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단정 수립 이후부터 이른바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일반대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권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북진 통일론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물론 공존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반공 논리를 갖고 있었으며,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는 허구적 구호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승만 정권은 이를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고, 그 외의 다른 통일 논리를 완전 봉쇄하였다.<sup>20)</sup>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정치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

---

20) 안병욱, 「민족통일과 한국사학의 과제」, 김용섭선생기념논총, 『한국사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182~183쪽.

였다. 그 당시 학계도 1950년대까지는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민족분단을 합리화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국사 교육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제 1차 교육 과정기에는 정부의 의욕적인 교육과정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중에는 모든 교과서가 초등학교용 『전시 생활 1·2·3』 과 중학교용 『전시독본』으로 통일 되었다. 이 교과서들은 그 자체가 국어 교과서인 동시에 사회 교과서의 역할을 했으며 그 내용은 반공사상 및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이었다.<sup>21)</sup> 그러나 휴전 후 1954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 역사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국사과는 여전히 사회생활과의 한 과목으로 존속시키면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개편한 점이다. 제 1차 교육 과정기인 제1공화국 하의 국사 교육은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국사과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반공이데올로기와 보수적 민족주의라 하겠다.<sup>22)</sup> 반공이데올로기는 지배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민족주의 역시 그들의 애국적 행위를 미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 표 2 > 신탁 통치와 민족분단 배경 교과서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1 차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 검정 교과서	“북은 소련 세력권에 들고 남은 미군정이 실시되던 중, 1947년 11월 제 2회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위원단을 조직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할

21)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 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359~361쪽 참조.

22)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국사교육과 지배이데올로기」, 『교과총서』 5, 한국역사연구회, 1989, 38쪽.

		<p>것을 결의하였으나, <u>북한 괴뢰 집단에서는 이를 거절하</u>  <u>매, 우선 남한에서 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고, 한국의 독</u>  <u>립을 추진시키게 되었다. ”</u>  (이병도, 일조각, 195쪽)  “그러나 독립은 곧 찾아오지 않았다. 일본군의 무장을 해  제할 목적으로 38선 이북에 들어온 <u>소련군은, 한국의 독</u>  <u>립보다는 자기의 세력 밑에 넣을 수 있는 공산국가로 만</u>  <u>들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 독립을 일부러 늦추고 있었다.</u>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과 미·소 공동위원회를 가졌으나  <u>만생각을 품은 소련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u>  ( 역사교육연구회, 정음사, 159쪽)</p>
--	--	---

1차 국사 교과서들의 현대사 내용을 보면 반공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서술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 괴뢰 집단”이나 “소련군은, 한국의 독립보다는 자기의 세력 밑에 넣을 수 있는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 독립을 일부러 늦추고 있었다.....만 생각을 품은 소련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등의 교과서 내용에서 보듯이 반공이데올로기는 지극히 감정적인 서술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이 반공주의적 관점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서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내용과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서술은 아예 생략되어 있다.

1차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서술이 생략된 까닭을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는 비록 6.25전쟁을 치르고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극도로 팽배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1945년 이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실제로 진행되었던 민족 분할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역사책에서 냉전 체제하의 이념적 갈등·대립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분단 상황이 연출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신탁 통치 문제를 빌미로 모스크바 3상 결정 지

지로 돌아선 좌익에게 분단의 책임을 전가하기가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sup>23)</sup>

또한 그 당시 한국 사학계는 1950년대까지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워 통일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인식체계를 세우거나 민족분단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sup>24)</sup> 1954년에 간행된 『국사개론』의 경우 분단정부 수립이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소양군간에 일시 군사적인 조치로 분점케 된 경계선으로 38도선은 새로 대립되어 가는 두 세계의 경계선으로 점차 硬化되어 갔다. 1945년 12월 모스크오 3상회의에서는 새로 한국임시민주정부 수립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성립되었으나 미 제안에 대하여 소련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회의는 결렬되고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였다.<sup>25)</sup>

1958년에 간행된 『국사신강』의 내용을 보면 임시정부 수립 논의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른바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도 통일을 위한 결의라는 의미 정도로 서술했을 뿐이다.<sup>26)</sup>

미·소 양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외상회의를 열고 한국통일 문제를 협의한 끝에 최고 5개년의 미·영·소·중 4대국의 의한 신탁통치를 결의 하였다. 이에 따라 익년 3월에 한국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제야 한국의 통일이 눈앞에 이루어질 것

---

23) 안병욱, 앞의 논문, 189~190쪽.

24) 안병욱, 앞의 논문, 183쪽.

25) 한우근, 김철준 공저, 『국사개론』, 명학사, 1954, 516쪽.

26) 안병욱, 앞의 논문, 185~186쪽.

같이 보였다.<sup>27)</sup>

이처럼 1950년대 한국사학은 국내의 좌우 대립이나 갈등이 미·소의 분할 점령과, 소련이 미·소 공동 위원회를 결렬시키고 유엔 결의안을 거부함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고 모스크바 3상 결정과 신탁 통치 문제가 민족분단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 2. 군사독재정권기의 신탁 통치 서술 ( 2차~5차 교육과정)

군사정권의 성립과 더불어 1960년대는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군사정권이 이 무렵 변화된 국내외 조건에 대처하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소 양진영의 냉전이 그간의 군사적인 대치에서 1950년대 말부터 공존을 전제로 체제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이전에는 멸공을 외치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해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에 따라 남북의 대결에서도 멸공의 관점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한사회의 정통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승공’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남한 내부에서 반공주의를 이념화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제 2차 교육 과정기는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로 교육 과정 개편의 방향은 5·16의 정당성과 당시 군사정권의 혁명 사업을 선진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2차 교육 과정의 목표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현대사 부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

27) 이흥직, 신석호, 조좌호, 한우근, 『국사신강』, 일조각, 1958, 431쪽.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sup>28)</sup>

제 3차 교육 과정기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의 군사정권기로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공, 안보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시기이다. 유신정부는 1974년 12월 31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하여 3차 교육과정 개편을 전면 실시하였다. 3차 교육과정 개편은 국민 교육 현장의 반포에 이어 제창한 국적 있는 교육을 전반적 목표로 하였다. 3차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색은 국사교육의 강화에 있었다. 그 결과 사회과의 한 교과목이었던 국사를 사회과에서 분리하여 독립교과로 하고 국사를 초, 중, 고, 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시행되었다.<sup>29)</sup> 당시 학계에서는 국사 교과서의 단일화에 대해 반대하고, 복수의 교과서 발행을 주장하는 여론들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실행하였다. 이런 국정화의 목적은 정부의 시책을 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단순한 행정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sup>30)</sup> 결국 국사 교육의 강화와 역할은 체제 수호론 방향으로 흘렀다.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함께 4차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고, 노태우 정권의 등장 이후 5차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과 국정 교과서라는 틀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이는 교과서 현대사 부분의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신탁 통치 관련 서술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

28) 정혜영, 앞의 논문, 5쪽.

29) 김영주,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23쪽.

30) 이런 국정화 조치로 국정, 김인정 제도하의 교과서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었고 국사 교과서는 1종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국정화제도와 1·2종의 교과서 제도는 6차 교육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져 갔다.

< 표 3 > 신탁 통치와 민족분단 배경 교과서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2차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 검정 교과서	<p>“그러나 <u>소련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여 이를 방해하였다.</u>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개최된 미·소 공동 위원회는 <u>그 때문에 결렬되고</u> 독립의 전도에는 <u>압영이 비치게 된 것이다.</u>” (이홍직, 동아출판사, 241~242쪽)</p> <p>“그러나 <u>1945년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외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안이 가결되자,</u> 국제적 신의를 위배하고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하여 민족진영에서는 <u>일치단결하여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u> 1946년 1월, 소란 가운데 미·소 공동 위원회의 준비 회담이 열렸으나 반탁 운동을 전개한 민족진영의 제거를 주장하는 <u>소련의 태도로 결렬되었으며,</u> 1947년의 제 2차 위원회도 <u>소련의 비타협적 주장으로 정돈 상태에 빠졌다.</u>” (이원순, 교학사, 241쪽)</p>
3차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1976) - 국정 교과서	<p>“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의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의 5개년 신탁 통치안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 3국 외상 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자, 우리 민족은 분노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u>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반탁 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중도에 돌변하여 민족적 양심을 짓밟고 찬탁을 주장하여 국민을 실망하게 하였다.</u> 그런데, <u>소련 측은 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정부를 세우자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소 공동 위원회는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u>”</p>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4 차	<p>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문교부(1982) - 1종 교과서</p>	<p>“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1945.12.) 우리 국민은 결연히 일어나 맹렬한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능력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하였으며,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반탁 운동이 확산되었다. <u>처음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반탁 운동에 참가하여(1946.1.) 민족적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 싶었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민족적 양심을 외면한 채 찬탁을 외쳐 국민의 빈축과 실망을 샀다.</u>” “그러나, <u>소련측이 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정부를 수립하기를 고집하여, 모든 정치단체의 참석을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국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u>”</p>
5 차	<p>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1990) - 1종 교과서</p>	<p>“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5개년 간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능력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하였으며,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반탁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u>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까지 반탁 운동에 참가하여 민족의 단합의 계기를 마련되는 듯 싶었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은 곧 찬탁으로 돌아서서 많은 국민의 빈축과 실망을 샀다.</u>” “그러나 <u>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을 협의하기를 고집하는 소련측과, 모든 정치단체의 참석을 주장하는 미국측의 주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다.</u>”</p>

위 교과서의 서술들을 보면 학습내용이 1차와 비교하여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으로 2차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다. 2차 교육과정 동아출판사 교과서는 소련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여 독립을 방해하였다고 서술하였고, “그 때문에 결렬되고”라는 표현은 마치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이 순전히 소련 때문

에 결렬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동아출판사에 비하여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의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 없이 마치 신탁 통치안이 전부인양 서술되어 있고, 미·소 공동 회의의 결렬 원인도 소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2차 교과서들의 이런 서술의 등장 배경은 1960년대 역사학계의 반공적 역사서술이 강화되는 것의 영향인 듯하다. 반공이데올로기 적으로 찬·반탁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국사 개설서는 이기백 교수의 『국사신론』이 처음인 것 같다. 이는 1, 2차 국사 교과서 서술자인 이병도의 역사서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후 다른 많은 개설서들과, 특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본 골격으로 반영돼 한국사 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sup>31)</sup> 이들의 서술 기조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를 신탁 통치안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민족분열의 책임을 ‘반탁’에서 ‘찬탁’으로 태도를 바꾼 좌익세력에 전가하고, 이승만 정권이 유엔의 결의에 따른 남한 총선거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초기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1960년대의 반공적인 역사서술의 강화는 이병도가 1964년 개정판 『한국사대관』에서 이른바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새삼스럽게 첨가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는데, 모스크바 3상 회의는 그의 이전의 글들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그는 반탁 운동이 미국의 동정을 사게 됨으로써 남한정부 수립을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그는 남북분단의 국내적 요인을 신탁 통치 문제와 관련된 조선 공산당의 잘못에서 찾았으며, 조선 공산당의 행동을 배신행위이며 자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식

---

31) 안병욱, 앞의 논문, 189쪽.

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점은 이후 1980년대까지 남한사학계의 지배적인 경향을 이루었고, 3차에서 5차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단적인 예로 3차부터 5차 모두 2차 교과서의 서술과 다름없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전문 중 임시 정부수립에 대한 언급은 없이 신탁 통치 문제만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우리 민족(국민)이 분노하여 전국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3차부터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중도에 찬탁으로 선회했다는 소련 사주설이 등장하였고 이는 계속적으로 서술되었다.

신탁 통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 찬·반 논쟁이 아니라 신탁 통치는 누가, 무슨 의도로 제안했으며, 그 이후의 찬·반탁의 논쟁은 어떤 과정을 겪고, 민족사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고, 당시 상황을 반탁, 찬탁으로 나누고 반탁은 애국, 찬탁은 사대로 규정짓고,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은 돌변하여, 민족적 양심을 짓밟고 찬탁을 주장하여 국민을 실망하게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앞의 서술 표현 강도가 좀 더 심화,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3차에서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였다”란 표현이 4차에서는 “국민의 빈축과 실망을 샀다”, 5차에서는 “많은 국민의 빈축과 실망을 샀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우선 교과서로만 신탁 통치 문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반공주의적 시각을 갖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 뒤이어 진행되는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원인에 대해서도 미·소 양국의 입장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소련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sup>32)</sup>

---

32) 소련이 반탁 세력을 제외하고자 주장한 이유는 반탁 운동이 모스크바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실제로는 반탁 투쟁이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로 반소·반공 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것도 큰 이유였다. 그리고 소련은 여운형 등 중도좌파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3상 결정을 중요시한 김규식 등 중

### 3. 민주화 이후 국정 교과서 서술의 추이

( 6차~7차 국정 중, 고등학교 교과서 )

1996년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사 교과서가 개편되었다.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국사 교과서 정책에 있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기에 정착된 국정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김영삼 정부 또한 자신들의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성과 지배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한 채, 국사 교과서의 개편을 단행하였다.<sup>33)</sup> 또한 3차 교육과정부터 독립교과로 유지되어 오던 국사과가 폐지되어 교육과정 편제상에 사회과 속으로 통합 강화의 움직임은 역사교육의 약화로 이어져 역사학이나 역사교육계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sup>34)</sup>

그리고 교과서가 가진 해당 시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는 성격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3, 4 공화국 시대에 강조되던 경제개발과 민족중흥,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반공의지 등은 제 5공화국의 정의, 복지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대치되었고, 6공화국에서는 5공화국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대신 북방정책 등 정권의 치적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민정부의 주된 담론이었던 세계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이 현대사에 대한 역사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암시가 등장한다.<sup>35)</sup>

---

도우파도 임시정부에 참여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미·소 공동 회의 결렬 이유를 소련과 좌익의 탓으로 돌리는 교과서의 서술은 문제점이 있다.

33) 정연호,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화 및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12쪽.

34) 정혜영, 앞의 논문, 13쪽.

35) 이인영, 「당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한국 근·현대사 쟁점에 대한 1차~7차 국사 교과서 서술 비교, 2004, 9쪽.

제 7차 교육과정은 외형적 체제에서 이전에 비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별 교육과정을 없애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 3학년은 심화선택 과정으로 나누었다. 국사에 있어서는 근·현대사 부분이 심화선택 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란 제목의 6종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 발행되었다. 그런데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라는 교육과정 구성의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고등학교에서 학교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를 아예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sup>36)</sup> 왜냐하면 선택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가 6종 검정 교과서로 전환 발행되어 나오면서, 7차 국정 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근·현대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소략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신탁 통치 관련 서술만 보더라도 7차 국정 교과서의 경우 6차에 비해 상당히 축약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 표 4 > 신탁 통치와 민족분단 배경 교과서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6차	중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교육부(1997년 초판) - 국정 교과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한국에 대하여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였다. 신탁 통치란,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우리 민족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광복 후, 독립 정부의 수립을 고대하던 국민들은, 신탁 통치의 결정을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

36)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285쪽.

37) 7차 국정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내용이 적은 관계로 6차 교과서와의 내용 비교를 돕기 위해 6차와 7차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6차	<p>중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교육부(1997년 초판)  - 국정 교과서</p>	<p>“이를 계기로 반탁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들까지 반탁 운동에 참가하여 민족적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곧 태도를 바꾸어 신탁통치 안을 지지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소련 측은 찬탁을 주장하는 단체들만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고집하였고, 미국 측은 모든 정치 단체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소 공동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의 대립하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p>
6차	<p>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1996)  - 국정 교과서</p>	<p>“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1945.12.) 이 회의에서는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하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신탁 통치는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민족에게는 식민지 지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은 우리민족에게는 모욕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제 2의 광복 운동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였다.” “반탁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서울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련은 신탁 통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만을 미·소 공동 위원회와의 협의 대상으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련의 주장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공산당만을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 시키려는 의도였다. 두 차례의 미·소 공동 위원회 회의는 미·소간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끝내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p>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7차	<p style="text-align: center;">중학교 국사 도서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2002) - 국정 교과서</p>	<p><b>* 소제목: 신탁 통치 문제</b>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에 대해 최고 5년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광복 후 독립정부의 수립을 고대하던 우리 민족은 신탁 통치의 결정을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민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를 계기로 반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공산주의자들까지 반탁 의사를 밝혀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곧 태도를 바꾸어 신탁 통치안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놓고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진영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찬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좌우 대립이 치열해졌다....”  <b>날개: 신탁 통치-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b></p> <p><b>* 소제목: 미·소 공동 위원회</b>  “신탁 통치안에 대한 결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소련 측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로만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 측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소 공동 위원회는 양측이 주장이 대립되고 미·소간의 냉전이 격화되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b>날개: 미·소 공동 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1946년 3월에 서울 덕수궁에서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b></p>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7 차	고등학교 국사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편찬 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2002) - 국정 교과서	<p><b>* 소제목: 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b></p> <p>“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소련·영국의 3국 외상 회의(1945.12)에서는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최고 5년간의 한반도 신탁 통치 등을 결정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은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에 분단을 우려한 인사들의 좌우 합작 운동과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남북 협상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p>

우선 6차 교과서의 특징을 보면 이전 교과서들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신탁 통치만 강조하여 서술한 반면 6차에서 부터는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 공동 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도 서술되었다. 또한 6차에서부터는 신탁 통치를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학생들에게 신탁 통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찬·반탁 운동에 관해선 3~5차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반탁은 애국, 찬탁은 사대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신탁 통치 문제를 협애화하여 서술하였다. 그래서 반탁 운동이 대중에게는 순수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맥락에서는 우익세력의 중경 임시정부 추대 운동, 반소·반공투쟁과 상호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며 진행된 정치 주도권 투쟁이기도 한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표현대로 “반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친일파들의 재등장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였다”는 식의 형식 논리에 기대어 폭 좁은 이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3차부터 서술되기 시작한 ‘소련 사주(지령)설’이 6차와 7차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론자들 모두가 소련의 사주로 신탁 통치안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흔히 조선 공산당의 노선전환은 ‘소련의 지령 때문에 하루아침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표변’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련의 지령 외에도 다른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매우 신중하고 점차적인 전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조선 공산당은 소련의 신탁 통치 주장설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태도를 보류하였으며, 1945년 12월 31일에는 신탁 통치를 철폐시키고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민족통일전선 결성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46년 1월 1일 인민공화국과 임시정부의 합작기도가 거의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산당의 노선전환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인공 중앙인민 위원회는 2일 미·영·중·소 4개국에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전문을 보내 마침내 지지노선으로 선회를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이 전문의 셋째 항을 보면 “이 결정은 국내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므로 3상 회담의 진보적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전문에는 신탁 통치라는 표현대신 모스크바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즉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이다.<sup>39)</sup>

또한 조선 공산당이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다. 그러므로 국사 교과서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신탁 통치 지지’라는 표현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라고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런데 6차와 7차 중학교 교과서들은 여전히 이전의 교과서들과 변함없이 “공산주의자들의 신탁 통치안 지지”란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6차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38) 이완범, 앞의 논문, 247~248쪽.

39) 이완범, 앞의 논문, 248~249쪽 참조.

“공산주의자들의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로 서술되어 있어 같은 6차 교과서인데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서술상의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6차와 7차의 중학교 교과서를 비교해 7차에서 개선된 점이 있다면 6차에서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지만”이란 표현이 7차에서는 “처음에는 일부 공산주의자들까지”라고 조금 더 객관화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7차에서는 ‘신탁 통치 문제’와 ‘미·소 공동 위원회’를 나누어 6차에 비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서술된 내용은 비슷하고, 단어의 어미, 접속어, 서술어의 형태만 다를 뿐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 또한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 소제목을 ‘신탁 통치 문제’로 하여 여전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의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임시정부 수립 내용보다는 신탁 통치 문제만 부각되어 있으며, ‘찬탁과 반탁’에 초점을 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1차부터 7차까지 국정 국사 교과서들을 살펴 본 결과 그동안 많은 연구로 밝혀진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우리나라에 신탁 통치를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한 내용서술도 없고, 여전히 반탁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도 없이 반탁은 ‘제2의 광복운동’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도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소련의 사주(혹은 지령)를 받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탁 통치 파장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와 같은 경향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국정 교과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신

탁 통치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우리 민족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제적 힘의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고, 합리적 선택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포괄적 이해, 당시의 미·소 관계와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정 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 IV. 검·인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 서술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6종 교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을 알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고 언급되어 있다.<sup>40)</sup> 교육과정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안의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 임시정부 수립내용보다는 ‘신탁 통치’ 문제만을 부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서의 전체적인 내용과약보다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에 중심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서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사실 보다는 ‘신탁 통치’라는 입장에 맞춰서 서술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sup>41)</sup>

이를 참고로 이 장에서는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이해가 7차 교육과정의 요구와 필자들의 역사 인식에 따라 각 교과서 서술에 어떤 시각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서술 사례를 제시하고, 그 특징을 간단히 비교 분석해보겠다. 참고로 교과서마다 내용전개 방식이 다르고, 신탁 통치 문제의 성격 이해가 사료를 이용한 <탐구활동>으로 대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본문 서술 내용을 절대 비교할 수 없음을 먼저 확인해 둔다.

40) 7차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 앞의 책, 176쪽.

41) 정인웅, 앞의 논문, 2004, 36~37쪽.

< 표 5 > 신탁 통치와 민족분단 배경 교과서 내용 비교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p>금 성 ①</p>	<p><b>* 소제목: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미·소 공동 위원회</b>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모스크바에서 외무 장관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였다.(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 결과, 임시 정부의 수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강대국들에 의한 잠정적인 신탁 통치 실시 등에 합의하였다. 회의의 결과는 ‘신탁 통치 실시’만이 부각된 채 국내에 알려졌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 사이에는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우익은 신탁 통치 실시를 반대한 반면, 좌익은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찬성하였다.”</p> <p><b>* 한결음 더 다가서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국내의 보도</b>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서로 다른 신탁 통치안을 내세웠다. 미 국무 장관 번스는 한국인 참여가 제한된 5년 동안의 신탁 통치안을 핵심으로 한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12월 20일 한국에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임시 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를 5년 이내로 한정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 회의의 결과는 곧 신문보도로 국내에 전달되었다. &lt;동아일보&gt; 1945년 12월 27일자 1면 머릿기사로 소련이 38도선 분할을 구실로 신탁 통치를 주장한 반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국내에서는 곧 반소련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반탁 운동이 벌어졌다.” (258~259쪽)</p> <p><b>* 활동: 임시정부 수립과 반탁의 갈림길</b>                      - 자료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                      - 자료2: 우익과 좌익의 대립면, 좌익은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찬성하였다.”</p>
<p>두 산 ②</p>	<p><b>* 소제목: 모스크바 협정과 반탁 운동</b>                      “미국·영국·소련의 3국 외상들은 .....4개 항목의 모스크바 협정을 발표하였다. (1945.12.) 그 내용은 민주주의 원칙하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원조하기 위한 미·소 양군 사령부의 대표 회의 개최 등이었다. 모스크바 협정의 신탁 통치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남한의 정국은 크게 소용돌이 쳤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에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신탁 통치 반대운동에 나섰다.”</p> <p>“<u>좌익세력은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지만 소련의 사주를 받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그 입장을 바꾸었다.</u> 이에 신탁 통치 문제는 우익 세력의 반탁 운동과 좌익 세력의 모스크바 협정 지지 운동으로 심한 좌우 대립을 초래 하였다. <u>대다수의 국민들이 반탁 운동을 지지하였기 때문에</u> 우익은 그 세력 기반을 확대하였고, 좌익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였다.”</p>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p>두 산 ②</p>	<p><b>* 소제목: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와 좌우 합작 운동</b>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의 덕수궁에서 개최되었다(1946.3.). 미·소 공동 위원회는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에 대한 미·소간의 의견 대립으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 안에 반대하는 정당·단체와는 협의를 할 수 없다 하였고,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모든 정치 단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의 대상 문제 때문에 생긴 미·소의 대립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261~263쪽)</p> <p><b>* 읽기 자료</b>  <b>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내용</b>  (미 국무성 문서, 1946, 워싱턴)</p>
<p>중 앙 ③</p>	<p><b>* 소제목: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좌우익의 대립격화</b>  “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신탁 통치안을 결의하였다.....우리 민족은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을 민족적 모독으로 생각하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익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였으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의 본질은 임시 정부 수립에 있다고 파악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 대다수의 남한 민중에게 신탁 통치는 곧 식민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익 세력이 주도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은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세력은 소련이 먼저 신탁 통치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반소·반공 운동으로 몰아갔다. 결국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하여 국내의 정치세력은 급속히 좌·우익 진영으로 양분되어 심한 대립을 보였다.”</p> <p><b>* 소제목: 미·소 공동 위원회의 실패</b>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다.(1946.3.). 그러나 이 회의는 임시 정부 수립의 협의 대상 문제로 끝내 결렬되었다. 즉,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련의 주장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공산당만을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은 자기 나라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벌여 자국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타협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277~279쪽)</p> <p><b>* 탐구활동: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b>  - 자료1: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1945.12 .28.)  - 자료2: 신탁 통치 반대운동 사진  - 자료3: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지지 운동 사진</p>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p>대한 ④</p>	<p><b>* 소제목: 신탁과 반탁의 갈림길</b>  - 학습 목표: 모스크바 3국 장관 회의의 결정내용을 이해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한 이유와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이유를 살펴본다.  “1945년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무 장관이 모여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한국을 최고 5년 동안 미·영·중·소의 신탁 통치 하에 두기 위한 협약을 맺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 신탁 통치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우리 민족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다.(250~251쪽)  <b>* 탐구활동 1: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의 결정에 대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b>  - 1 자료 읽기: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의 반탁 시위 대회 선언문  - 2 자료 읽기: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지지 담화문  <b>* 탐구활동 2 :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까닭은 무엇인가?</b>  - 3 도움글: 미·소 공동 위원회의 협의 대상을 둘러싼 갈등  - 4 도움글: 반탁 시위에 참여한 남한의 정당과 단체를 제외시킨 소련의 협의 대상 분류</p>
<p>법문 ⑤</p>	<p><b>* 소제목: 신탁 통치 문제</b>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측은 신탁 통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소련안을 약간 수정하여, 미·소 양군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이 협의하여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한 후 최고 5년 동안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한 반탁 운동이 전개되었다.” “ 좌익도 처음에는 반탁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신탁 통치를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후원이라고 해석하면서 곧 찬탁으로 급선회하였다.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결 차이로 좌·우익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  <b>* 소제목: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b>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을 두고 우익과 좌익이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대립하는 가운데,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1946.3.) 이때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은 신탁 통치 반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다.....거듭되는 논란 속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휴회되었다.” (248~280쪽)</p>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b>법 문</b> <b>⑤</b>	<p><b>* 자료읽기</b>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1945. 12. 28 )</p> <p><b>* 탐구: 신탁 통치안에 대한 두 입장</b>  - 자료1: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의 반탁 시위 선언문  - 자료2: 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지지 담화문</p>
<b>천 제</b> <b>⑥</b>	<p><b>* 소제목: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 대립의 심화</b>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 협정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한국에서 임시 민주 정부를 조직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이 설립된 임시 민주 정부와의 협의 하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한국에 대하여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국민들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을 전개하였다.”  “처음에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의 입장을 표명하였던 좌익 정치 세력들은 1946년 1월 모스크바 3상 협정에 대한 지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었다.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도 3상 협정에 대한 지지의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3상 협정의 내용 안에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모스크바 3상 협정을 둘러싼 좌·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p> <p><b>* 미·소 공동 위원회와 좌우 합작 운동</b>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문이 발표된 후 서울에서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1946.3) 미·소 공동 위원회에는 미군정과 소군정의 대표가 참석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조직을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만을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좌익 정치 세력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 한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협의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에 참여할 정치 세력들을 선택하려고 대립하였고,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었다.” (271~273쪽)</p> <p><b>* 탐구활동: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협정안</b>  (1945. 12. 27)</p> <p><b>* 역사자료실: 찬탁과 반탁</b>  -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 주최 시민 반탁 시위대회 선언문  - 모스크바 3상 회담 결정에 대한 조선 인민 공화국 중앙 인민 위원회의 결정서</p>

7차 검정 교과서는 이전의 국정 교과서에 비하여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미·소 공동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었다.<sup>42)</sup> 그리고 서술사례를 주의 깊게 읽다보면 7차 검정 교과들은 국정 교과서의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서술이 많이 극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마다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 대중이 모스크바 결정을 또 하나의 식민 지배나 민족적 모욕으로 인식한 이유, 좌익이 반탁에서 모스크바 결정 지지로 입장을 바꾼 이유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국정 교과서들의 이전과 다른 없는 일관된 내용서술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구성과 달리, <탐구활동>이나 <읽기자료> 등을 삽입하여 풍부한 자료사진들과 참고문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역사적 사고의 폭을 넓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

다음은 각 교과서들마다의 서술상, 구성상의 특징 등을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① 교과서에서 특기할 것은 <읽기자료>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 ‘동아일보 신탁 통치 보도 기사’ 도판과 함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는 이전 국정 교과서들과는 다른 초점으로 반탁 운동이 『동아일보』에서 왜곡 보도되어 원래는 미국의 주장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반탁 운동이 왜 반소·반공 운동의 차원으로 전개 되었는지 적절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⑤ 교과서도 미국이 신탁 통치를 먼저 제시한 점을 언급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내용에 대하여 <자료읽기>를 통하여 제시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안에 합의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잘 나와 있다. 또한 신탁 통치에

42) 사회과 교육과정에 한국근·현대사 내용영역별 서술을 보면 ‘미·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이유와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 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놓았다. 교육부, 앞의 책, 176쪽 참조.

대한 입장을 지지와 반대의 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반탁 시위 선언문’과 ‘지지 담화문’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③ 교과서는 이전의 국정 교과서와는 다르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의 본질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파악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서술하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반소·반공 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⑥ 교과서는 좌익 세력들이 모스크바 3상 협정에 대한 지지로 전환된 것에 대하여 “좌익 세력들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도 3상 협정에 대한 지지의 입장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3상 협정의 내용 안에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었다”고 서술하여 좌익의 찬탁 지지 입장으로서의 선회가 단순히 소련의 사주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 당시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익 뿐 만이 아닌 민족주의 세력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검정 교과서 집필자들이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검정제도가 가진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국정 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나 역사를 훨씬 바르게 서술할 가능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sup>43)</sup>

그러나 여러 교과서 서술에서 내용의 부적절한 취사선택과 어감의 차이가 사실의 객관적 이해를 막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교과서의 ‘소련의 사주를 받아’라는 표현은 다른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은 이전의 국정 교과서들이나 7차 국정 교과서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④ 교과서도 6차 국정 교과서 서술의 일부를 앞뒤 순서만

---

43) 김종훈, 앞의 논문, 역사비평사, 2003, 287쪽.

바꾸어 반복함으로써 ‘모스크바 협정=신탁 통치’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다. ③ 교과서의 경우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신탁 통치안을 결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어 마치 신탁 통치안이 모스크바 결정안의 모든 내용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 물론 <탐구활동> 자료로 협정의 전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본문내용이 사실을 이해하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sup>44)</sup>

그리고 각 교과서들은 당시 국내 정치세력을 ‘좌익’과 ‘우익’이란 용어로 구체적 설명이 없이 서술하고 있다. 이는 좌익의 경우 민족의 당면 문제 보다는 오직 소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세력으로만 오해될 소지도 크고, 또한 우익의 경우에는 모두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세력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sup>45)</sup>

본문 서술만으로 각 교과서의 신탁 통치 문제 서술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도록 교과서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교과서들은 본문과 함께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도판>과 <읽기자료>,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을 위한 <탐구활동> 등의 구성물을 포함시켜 기존의 텍스트 중심 교과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46)</sup> 더구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수많은 사실의 무게, 역사서술의 객관성, 엄숙성에 대한 부담, 교육과정의 강박과 현대사 인식의 제약성 때문에 필자의 역사인식을 본문이 아닌 구성물에 숨겨놓으려는 경향도 보인다. 예를 들어 ① 교과서의 경우 『동아일보』의 신탁

44) 김종훈, 앞의 논문, 287쪽

45) 정인웅, 앞의 논문, 37쪽.

46) < 표 3 >와 < 표 4 >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읽기자료>나 <탐구활동>이 없다.

통치 왜곡 보도 기사를 <읽기자료>로 처리하여 반탁 운동이 시작되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한 점이다. 그리고 그 밖의 교과서들이 <탐구활동>에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의 반탁 시위 선언문’과 ‘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지지 담화문’을 삽입하고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이유를 정리해보자”나 “좌익진영이 신탁 통치 결정 지지로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을 조사해보자” 등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해답을 얻도록 한 점이다.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상황과 마주하면서, 말 그대로 스스로 역사를 생각하고 탐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문을 제외한 구성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주의 깊게 보면 각 교과서가 <탐구활동>이나 <읽기자료>에서 같은 주장의 사료를 인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용한 사료의 내용과 방식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각 교과서의 <탐구활동> 유형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교과서의 <탐구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를 자료로 배치하고 질문을 던지는 유형이다. ①, ③교과서가 그렇다. ①, ③ 교과서 모두 선행 질문은 우익과 좌익이 결정서의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① 교과서에서 “내가 그 당시 살았다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생각해 보고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점인데,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역사적 상황에 이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둘째, 서로 대립하고 있던 우익과 좌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료를 병렬로 배치하고 질문을 던지는 유형이다. ④, ⑤, ⑥ 교과서가 그렇다. ④ 교과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한 까닭을 묻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의 지시가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교육 과정을 준수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점, 학생 스스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도록 사료를 제시하는 취지에서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⑤ 교과서의 경우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대다수의 국민들’이란 표현과 다른 “신탁 통치 반대 주장에 동조한 정치 세력을 조사해보자”라고 과제를 제시하여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을 유도 했다. ⑥ 교과서는 찬탁과 반탁의 이유보다는 “찬탁과 반탁으로의 분열은 민족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자”라고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를 유도한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기자료>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내용’만을 제시하고, <탐구활동>이나 과제물, 질문 없이 서술되어 있는 ② 교과서이다. 앞서서도 언급 되었듯이 이전의 국정 교과서들과 별다른 것 없는 본문서술의 논리구조에서 볼 때 당연한 서술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② 교과서를 제외한다면 각 교과서가 평균적으로 1쪽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고 <탐구활동>을 배치하고 있어 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단지 한국근·현대사의 수업 시수나 교과서 지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미·소의 체제 대립구도가 한반도에서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구도로 고착되고 결국 분단정부 수립의 내적기제로 작용했던 사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집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음은 분명하다.<sup>47)</sup>

---

47) 김종훈, 앞의 논문, 294쪽.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을 알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고 제시하여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서술 범위의 한계를 규정해 놓았다. 이처럼 7차 검인정 교과서는 집필과정에서 검인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작성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과 집필상 유의점에 구속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국정 국사 교과서와 연계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특징이라면 국가는 그 교과서가 사용할 수 있는 체제와 내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대로 한다면 아무리 학계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와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봉쇄되고 만다.<sup>48)</sup>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과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편향적이고 이분법적(반탁=애국, 찬탁=매국)인 기존의 설명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1981년 발간된 『한국사연구입문』의 「8·15해방」을 서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스크바 3국 회의의 결정은 우리 민족의 자치 능력을 의심한 점에 있어서는 당시의 정치가들의 격분을 살 만했으나, 민족을 분단한다거나 국토의 일부를 식민지로 하겠다는 저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분단의 비극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오늘날, 그 문제에 대한 이때까지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 같다..... 신탁 통치의 목적은 한국의 자립과 독립에 있었으며, 특히 일제

48) 주진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검정 시스템」, 『한국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따진다.』,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2004, 3쪽.

의 잔재를 청산한 위에 건국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49)</sup>

이글은 또한 우익진영은 신탁 통치안을 빌미로 삼아 좌익을 민족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맹렬한 반탁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반공주의적 역사서술을 극복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1980년 전후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민족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되는 가운데 학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분단시대의 극복을 위한 실천적 역사연구를 주장했던 강만길은 해방 이후 남한의 역사를 분단시대로 규정한 『한국현대사』를 1994년에 재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그는 민족분단의 내부적 원인 중 민족사회 전체가 1945년의 시점에서 민족해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투철하지 못했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 지역을 독립시키기 위한 수단이요 과정이었지 신탁 통치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국내에 전달되면서 남북을 통한 통일 임시정부의 수립보다는 신탁 통치 문제로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안은 관변학계나 언론의 왜곡에 의해 지금까지 신탁 통치안이라고 잘못 알려져 왔다.<sup>50)</sup> 더욱 문제는 그동안 역사학계나 국사 교과서에서도 『동아일보』 왜곡보도 내용과 같은 시각의 서술이 오보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에서 모스크바 3상 결정안 중 제3항의 신탁 통치 실시만이 주로 서술되어 왔다. 또한 국사 교과서에서는 미국이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sup>51)</sup>에 의해서 소련보다 먼저 신탁 통치

49)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525쪽.

50)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568쪽.

실시를 주장했다는 점을 서술하지 않았다. 만약 신탁 통치 제안의 주체가 교과서에 바르게 전달되었다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찬·반탁 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과거와는 다른 매우 상반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생략되어 있고, 검·인정 교과서에서도 금성 교과서만이 참고자료 형태로 서술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을 준다.

---

51) 루즈벨트는 만주와 대만은 중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인도차이나와 한국은 신탁 통치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에 관해 이들은 신탁 통치위원국으로 미국과 중국 및 소련을 거명했다.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등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87, 66쪽.

## IV. 결 론

각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을 살펴보면서 정권의 변화나 국가의 내·외부 상황에 따라 국가적 시책이 달라지고, 이는 직접적으로 교과서 서술 경향에 영향을 주어 교육과정이 변화할 때마다 매번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통일국가인 남과 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신탁 통치 문제와 찬·반탁 운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민감하게 정부의 시책대로 서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때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이런 정부의 반공 정책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해방 후 현대사를 연구해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신탁 통치 문제는 지금까지 좌우익의 분열과 혼란이라는 논점에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사교육은 혼란과 분열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생산적이라 생각된다. 즉 학생들에게 좌우 갈등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동안의 국정 교과서들은 미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신탁 통치를 제안한 것을 생략하였고,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문 중 임시정부 수립 내용보다는 신탁 통치의 내용을 부각하여 찬탁과 반탁 운동 중 반탁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찬탁은 사대, 반탁은 애국인 양 서술하였다. 또한 반탁 운동에 결정적 원인이 된 『동아일보』의 왜곡보도와 같은 그릇된 경향의 서술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소 공동 회의 결렬 원인도 소련과 좌익의 탓으로 돌려 분단의 원인을 소련과 좌익에 둔 서술 경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참

고로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반공이데올로기 적이고, 이분법적인 교과서 서술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생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6종으로 다양화하여 심화선택과목으로 이전 국정 교과서 때와는 다르게 신탁 통치에 대해서 서술 분량도 많아지고 다양한 시각의 서술경향도 보였다. 예로 다양한 <탐구자료>와 <읽기자료>를 제공하여 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좀 더 심화학습 하도록 유도하였고, 내용도 상당히 객관화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 교과서의 서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교과서도 있었고, 또 7차 사회과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을 규정해놓아 그 틀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해야만 하는 한계점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집필상 유의점과 준거안에 의한 교과서 서술의 통제, 검정심사의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교과서의 편찬과정도 공개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유롭게 서술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과서의 내용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게 서술되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저 서

-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 교육부, 『사회과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0.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6.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82.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
- 국사편찬위원회,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6.
-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육부, 1997.
-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
- 김광남 등 지음, 『한국 근·현대사』, 두산, 2005.
- 김종수 등 지음,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2004.
- 김한중 등 지음,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4.
- 김한중,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삼지원, 1997.
- 김홍수 등 지음,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 2005.
-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현대편, 솔, 2003.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권, 청사, 1986.
- 심지연, 『미·소 공동위원회 연구』, 청계연구소, 1989.
-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역사교육연구회, 『국사』, 정음사, 1963.
- 이기백, 『국사신문』, 서울 제일출판소 인쇄본, 1961.

- 이병도, 『국사』, 일조각, 1956.
- 이원순, 『국사』, 교학사, 1968.
- 이홍직, 신석호, 조좌호, 한우근 공저, 『국사신강』, 일조각, 1958.
- 이홍직, 『국사』, 동아출판사, 1967.
- 주진오 등 지음, 『한국 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 정용욱, 『해방전후의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 한우근, 김철준 공저, 『국사개론』, 명학사, 1954.
- 한철호 등 지음,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5.

## 2. 논문

- 김영주,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김중훈, 「한국현대사는 어떻게 가르칠까?」, 안병우 외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등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87.
- 서중석,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문제 많다」, 『역사비평』 56호, 역사비평사, 2001.
-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2.
- 서중석, 「현행 중·고교 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문 분석과 개선방향」 『역사교육』 제79집, 역사교육연구회, 2001.
- 신혜숙, 「중학교 사회과목 국정 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천

- 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안병욱, 「민족통일과 한국사학의 과제」, 김용섭선생기념논총, 『한국사인식  
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국사 교육과 지배이데올로기」, 『교과총서』 5,  
한국역사연구회, 1989.
- 안재홍, 「자력건설과 자주건국」, 『민세 안재홍전집』 2, 지식산업사, 1983.
-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6.
- 이은주, 「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서술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인영, 「당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한국 근현대사 쟁  
점에 대한 1차~7차 국사 교과서 서술 비교, 2004.
- 정경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제1차 교육과정~제6  
차 교과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정연호,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정인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타난 미국관련 서술 분석」, 계명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정혜영, 「중·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내용 변화 분석」, 성신여  
대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주진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검정 시스템」, 『한국근·  
현대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따진다.』, 역사교육연구회, 한국  
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2004.
-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 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Abstract**

Various measures were resolved at Moscow Agreements in 1945 to settle the outstanding problems of Korean Peninsular. American proposals with the gist of the 4-power trusteeship and Soviet Union's amendments focusing on the democratic interim government were discussed. Moscow Agreements were very critical meeting to overcome Korea's partitioned situation by American and Soviet military governments. Major Moscow Agreements were to establish the US-Soviet Joint-Commission in Korea, to found unified interim democratic government, to adopt the policy of maximum 5-year trusteeship and to compromise bilateral military governments shortly. Therefore, it is not fair to see as if Moscow Agreements are simply identified as the bill for the trusteeship.

The trusteeship was first schemed by Roosevelt of US President. But Moscow Agreements were distorted as 'proposal for trusteeship' on the process of reporting by Dongah Daily Newspaper, and the Soviet Union was known as the subject of the trusteeship, which spurred the violent anti-trusteeship movement in Korea. The report of Dongah was proven wrong thereafter, but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turned into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m. The disputes on the trusteeship intensified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rightists and the leftists in Korea and enforced the cold war, external structure of the partition. This shock of trusteeship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n epoch-making event in Korean modern history because the characters of domestic political confrontations remarkably changed after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clarify who firstly proposed the trusteeship.

In the description in regards to the trusteeship in school texts, the texts of Moscow Agreements are highlighted as a proposal for the trusteeship, influenced by the anti-communist ideology and political groups. Without clarifying the subject of the trusteeship, it is uneven and fragmentary to regard the anti-trusteeship as a royal and the trusteeship as a betrayal to the country. It is also stated in the texts that the leftist turned abruptly into upholding Moscow Agreements by the instigation of the Soviet Unions, and the breakdown of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s was attributed to the Soviet Union and the leftist. Even after several modifications of the education procedures, the texts and the description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and there are many parts which have no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ones. The problem is that the history textbooks do not reflect the findings of the scholars' studies on the trusteeships properly. After democratization, the texts about the trusteeship are described in detail and objectively, but they still have the aspect of anti-communism, following the distorted description of Dongah Daily Newspaper.